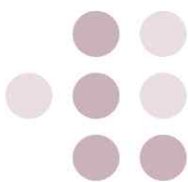


자치현안

정책



포커스



전북특별자치도의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목 차

I. 정부부처 정책동향

1. 청년뉴딜 8,000억원 투입, 청년 10만명 지원 (관계부처합동) 3
2. ‘빈집철거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 (관계부처합동) 4
3.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
4. 지방공항 연계 지역관광 활성화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7
5. 다국어 교통정보 제공으로 방한 관광객 이동 편의 강화(문화체육관광부) 8
6.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 의료체계 개선방안」 보고 (보건복지부) 9
7. 인구정책, 저출생 대응에서 인구전략으로 전환 (보건복지부) 10
8. 지역혁신 R&D 과제 306개 선정, 2년간 2,800억 원 투입 (중소벤처기업부) 11
9.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연료물질 안전 규제 혁신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 12

목 차

Ⅱ. 주요 연구기관 발표 자료

1. 급감하는 공중보건 의사, 의료취약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입법조사처) …… 15
2. 반려동물 식이제품 산업의 개발·양산화 지원 방향 (국회입법조사처) …… 17
3. AI 시대 일자리는 사라지는가 재편되는가: 한국의 대응 전략 (국회도서관) …… 18
4.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성 진단 및 전략적 제고 방안 (전북연구원) …… 20

Ⅲ.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분석

I

정부부처

정책동향

관계부처합동

1. 청년뉴딜 8,000억원 투입, 청년 10만명 지원

원문 바로가기

청년의 일자리 진입과 사회 복귀를 뒷받침하는 맞춤형 청년정책

- 정부는 청년 고용 악화와 미취업 청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총 8,000억 원 규모의 '청년뉴딜' 정책을 추진함
- 이번 정책은 청년 10만 명에게 새로운 출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도약, 경험, 회복 등 3개 분야로 구성됨
- '도약' 분야는 AI·반도체·로봇·바이오 등 첨단산업 중심의 실무형 교육과 직업 훈련을 지원하고, '경험' 분야는 공공·민간 일경험 기회를 확대함
- '회복' 분야는 고립·구직단념 청년을 대상으로 상담, 일상 회복, 직업훈련, 취업 연계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함
- 정부는 청년특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창업 지원 등을 병행하여 미취업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안정적 정착을 뒷받침할 계획임

청년뉴딜, 새로운 출발선
총 8,000억 원 투입 · 최대 10만 명 지원

청년 고용 · 훈련 · 회복 종합대책

왜 필요한가?

- 청년 고용률 **43.5%**
1분기 기준, 코로나19 이후 최저
- 미취업 청년 **171만 명**
실업 · 쉬었음 · 취업준비 포함
- 2030 인구의 약 **14%**

핵심: 맞춤형 3트랙 지원

도약
직업훈련 · 교육 강화

- 역 1.9만 명
- K-뉴딜 아카데미
- AI·반도체 등 첨단분야

경험
첫 경험 만들기

- 총 2.3만 명
- 공공 2만 · 민간 3천
- 고용24 이력 관리

회복
고립 · 취약 청년 지원

- 1.1만 명 확대
- 상담 → 회복 → 훈련 → 취업
- 청년미래센터 4 → 17곳

추가 지원 강화

청년특화트랙 신설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 최대 6개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연 최대 720만 원 지원

약 3만 명 혜택

도약 · 경험 · 회복을 통해 청년의 취업 출발선을 보장

관계부처합동

2. '빈집철거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



'빈집애(愛)' 누리집을 통한 '빈집철거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하여 속도감 있는 빈집 정비 추진

- 개인 소유의 빈집 철거 비용을 지원하여 정비 속도를 높이고 실효성 있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국토부 공동으로 '빈집철거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
- 기존의 직접 방문 방식에서 벗어나 PC 및 모바일을 통한 '빈집애(愛)' 누리집 간편 신청 방식을 병행 도입하여, 타 지역 거주 소유자의 관공서 방문 불편을 해소하고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 유도
- 빈집 소유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지방정부 담당자가 노후도와 서류를 검토하여 대상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전환, 필요한 서류만 선별적으로 접수·검토함으로써 지방정부의 행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
- 철거 후 부지를 일정 기간 주차장, 텃밭 등 공공 용도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시·군·구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며,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관리로 신청 누락 및 오류를 최소화하여 속도감 있는 빈집 정비 추진

빈집 철거 신청, 이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 기존 (현행)	✓ 변경 (개선)
방문 신청 vs. 온라인 신청	 기존 시·군·구 직접 방문 방식	 PC와 모바일 신청 기능 추가
빈집애(愛) 누리집 접속 및 신청	 시·군·구 방문	 전국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청서 제출
선별적 서류 제출로 행정 부담 경감	 모든 서류 일괄 제출	 1단계 검토 후 필요한 서류만 선별 접수
소유자 방문 번거로움 해소 및 사업 가속화	 원거리 거주 소유자 방문 번거로움	 편의 증대, 데이터 기반 관리로 빈집 정비 속도 가속

NotebookLM

3.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인허가 일괄처리 및 타임아웃제 도입, ▲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 시설 특례 등 규정, '27년 2월 중 시행 예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5월 7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힘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이하 'AIDC')의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제2조)하고 실태조사를 추진(제7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과기정통부 장관이 ▲전문인력 양성(제14조), ▲해외진출 촉진(제15조), ▲AIDC와 지역 사회 간의 협력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 마련(제16조), ▲전자파 영향 측정 장비와 관련된 지침을 고시(제17조) 할 수 있는 근거
- 국가AI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AIDC 사업자가 통합 창구(과기정통부)를 통한 다양한 인허가의 일괄처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한 경과 시 인허가 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타임아웃제'가 도입(제19조)
- AIDC를 비수도권으로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이번 법안에 비수도권에 일정규모 이하의 AIDC를 신축·증축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AIDC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규정(제19조)이 포함
 -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10MW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시행
- 시설물 설치기준을 완화(제21조)하여 AIDC에 불필요하게 많이 설치·낭비되던 시설물이 줄어들고, 민간의 AIDC 투자 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I 정부부처 주요정책

- 전북자치도는 새만금에 현대차그룹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건립을 예정하고 있는바, 법 시행에 맞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한 지원(제12조), 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제13) 등을 조례에 규정하여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정부부처 정책동향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제정

인허가 간소화와 비수도권 규제 완화로
AI 인프라 확충 기반 마련



핵심 내용

 <p>산업 육성 기반 AIDC 기준 마련 실태조사·전문인력 양성</p>	 <p>인허가 단축 통합창구 일괄처리 타임아웃제 도입</p>	 <p>비수도권 규제 완화 일정 규모 이하 AIDC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p>	 <p>시설 기준 완화 송강기·주차장 등 일부 설치 기준 합리화</p>	 <p>시행 일정 공포 후 9개월 경과 2027년 2월 시행 예정</p>
--	---	--	--	--

기대 효과

 <p>AI 데이터센터 투자·구축 속도 제고</p>	 <p>비수도권 투자여건 개선</p>
---	---

지방공항을 외래관광객 유치 거점으로 육성해 체류형 지역관광 기반을 강화

- 정부는 지방공항을 외래관광객 유치 거점으로 육성해 입국→지역 체류→소비로 이어지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추진 중
- 문체부·국토부는 대구부터 지방공항 연계 관광 활성화 포럼을 열어 슬롯, 숙박·교통, 관광콘텐츠, 온라인 판촉 등 지역 수용체계를 점검 중
- 정부는 서울 직행 중심의 기존 관광 흐름을 지방공항 중심의 지역관광 관문 구조로 전환할 방침
- 이를 위해 항공사 해외 영업망 활용, 외항사 지방공항 신규 취항 지원, 공항-도심-관광지 연계 교통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
- 아울러 관광진흥법 중심 체계를 관광기본법·관광산업법·지역관광발전법 등으로 재편하는 관광법제 개편도 추진 중

지방공항 기반 지역관광 활성화

지방공항 → 지역관광 → 체류 → 소비 확대



5. 다국어 교통정보 제공으로 방한 관광객 이동 편의 강화

방한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한 다국어 교통정보 콘텐츠 배포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외국인 관광객이 언어 장벽 없이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 및 지역 간 이동 수단 현황과 결제 방식, 예매 방법 등을 담은 다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교통정보 콘텐츠를 시각적 이미지 중심으로 제작하여 배포함
- 제공되는 콘텐츠는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여행자 유형별 교통 이용 흐름도', 철도 및 버스 등 주요 교통수단별 '결제 수단 및 방법 안내서(해외 신용카드 이용 가능 여부 포함)', 그리고 택시 호출이나 길 찾기를 돕는 '국내 대표 응용 프로그램(앱) 사용법 안내서'의 세 가지로 구성됨
- 해당 정보는 한국 관광 해외 홍보 플랫폼인 '비지트코리아(VisitKorea)', 누리소통망(SNS), 전국 관광안내소 내 정보무늬(QR) 부착, 교통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제공되며, 이를 통해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더욱 편리하고 즐겁게 여행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교통 환경을 조성할 계획임

한국 여행이 쉬워지는 '다국어 교통정보 콘텐츠'

<p>3종 핵심 교통 정보 가이드</p>	 <p>교통 이용 흐름도</p>	 <p>결제 수단 안내서</p>	 <p>필수 앱 사용법</p>
<p>주요 방한 시장 다국어 지원</p>	 <p>영어, 일본어, 중국어(번체·간체)로 제작 전 세계 관광객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p>		
<p>온·오프라인 채널 동시 배포</p>	 <p>온라인 VisitKorea 홈페이지, SNS</p>	 <p>오프라인 전국 관광안내소의 QR코드를 통해 바로 확인</p>	

NotebookLM

보건복지부


6.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 의료체계 개선방안」 보고

문
바로가기

권역별 모자의료 네트워크 연내 전국 확대 및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전라에서 효과가 검증된 '이송체계 혁신 모델(지역 맞춤형 이송지침 및 광역상황실 즉시 지원)'을 올 3분기 내 전국으로 조기 확대하고 관련 응급의료법 개정 병행 추진
- 연내 충청·전북·제주권까지 모자의료 협력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최종증 환자 치료를 위한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5개 광역권 중심 전국 6개소로 단계적 확충하여 365일 24시간 대응체계 강화
- 중앙모자의료센터 전원전담팀 상황요원 증원(5명→15명) 및 신규 정보시스템 도입으로 병원 선정 시간을 단축하고, 119구급차와 범부처 헬기(닥터·소방·군)를 공동 활용하여 고위험 환자의 신속한 이송·전원체계 구축
- 고액 배상 보험료 지원 대상을 응급실·신생아중환자실까지 확대하고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을 산모 중증 장애까지 넓히며, 고위험 필수의료 사고 시 기소 제한 및 형 감면 등 의료진의 사법적 형사부담 대폭 경감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안심할 수 있는 고위험 모자의료 체계 구축

현재의 한계	의료 안전망 개선 사항
 <p>지역 네트워크 및 이송 체계 부족</p>	<p>전국 모자의료 네트워크 및 이송 체계 혁신</p> <p>충청·전북·제주권 신규 구축, 119구급차·닥터헬기 등 범부처 헬기 연계로 신속 지원.</p> 
 <p>전문 의료센터 부족 (서울 편중)</p> <p>Seoul Only 2 Centers</p>	<p>중증 모자의료센터 전국 6개소로 확충</p> <p>4개 권역권 추가 지정, 전국적 수용역량 강화.</p> 
 <p>이송 전담팀 부족 및 느린 처리</p> <p>5 Staff</p>	<p>전원전담팀 3배 증원 및 정보시스템 개통</p> <p>인력 5명에서 15명으로 증원. 6월 개통 시스템으로 병원 선정 시간 대폭 단축.</p> 
 <p>의료사고 보상 및 지원 미흡</p>	<p>최대 3억 원</p> <p>불가항력 사고 국가보상 최대 3억 원 상향. 전문의 고액 배상 보험료 지원 응급실·중환자실까지 확대.</p> 

© NotebookLM

보건복지부

7. 인구정책, 저출생 대응에서 인구전략으로 전환

문
바로가기

「인구전략기본법」국회통과, 인구구조 변화 전반을 다루는 정책체계로 개편

- 정부는 2026년 5월 7일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편하는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킴
- 이번 개편은 인구정책의 범위를 저출생·고령화 대응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 간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 다양화,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으로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음
- 이에 따라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위원회'로 개편되고, 위원 규모도 확대(40명이내)되며, 시·도 단위에서도 인구정책 현안과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됨
- 또한 인구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사전협의제도가 도입되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만큼, 전북특별자치도도 관련 조례 정비와 추진체계 개편 등 선제적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인구정책, '저출생 대응'에서 '인구전략'으로 전환

「인구전략기본법」 국회 통과



저출생·고령화 중심 정책에서 인구구조 변화 전반을 다루는 체계로 개편

1



법률 명칭 변경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인구전략기본법

2



정책 범위 확대

저출생·고령화 →
인구 불균형·가구 변화·
인구 이동

3



추진체계 개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인구전략위원회
위원 규모 25명 → 40명

4



지역·예산 연계 강화

시·도 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예산 사전협의제도 도입
2027.1.1. 시행



핵심 포인트

인구정책을 국가·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다루는 종합 전략으로 전환

중소벤처
기업부

8. 지역혁신 R&D 과제 306개 선정, 2년간 2,800억 원 투입

문
바로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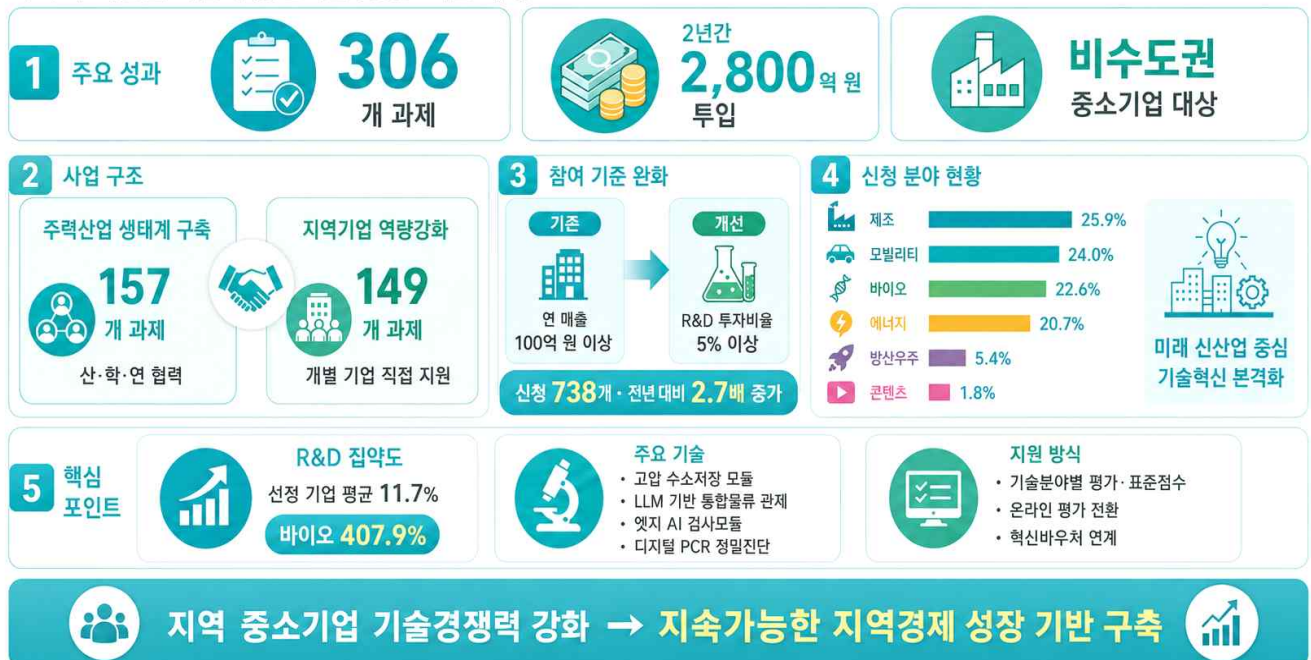
지역 주력산업 혁신과 중소기업 R&D 지원 확대

- 중소기업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중소기업 대상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신규 과제 306개를 선정하고, 2년간 총 2,8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임
- 이번 사업은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157개 과제와 지역기업 역량강화 149개 과제로 추진되며, 지역 주력산업의 기술혁신과 협업 기반 확충에 목적이 있음
- 올해부터는 R&D 투자비율 5% 이상 기업까지 참여를 확대해 신청 과제가 738개로 전년 대비 2.7배 증가했으며, 제조·모빌리티·바이오·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 중심의 기술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임

지역혁신 R&D 과제 306개 선정

자료: 대한민국 정부브리핑·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주력산업 혁신과 중소기업 R&D 지원 확대



원자력
안전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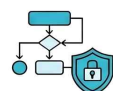



9. 소형모듈원자로(SMR)·핵연료물질 안전 규제 혁신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

원
문
바로가기

SMR 사전검토 제도 법제화 및 핵연료물질 안전 규제 합리화 등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예정

-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포함한 신규 원자로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인허가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개발자가 건설허가 신청 전 설계 단계에서 규제기관의 공식적인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사전검토 제도'를 법제화
- 행정지도로 운영되던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자 선임을 법적 의무로 명시하여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5종의 복잡한 신청 서류를 '핵연료물질안전보고서'로 통합하여 원자력 안전 규제의 합리화 및 행정 효율성 극대화
- 안전관리 실적이 우수한 사업자에 대해 해당 연도 정기검사를 면제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3천만 원 단일 상한액이던 과태료 체계를 위반 수준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여 법적 제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 제고
- 개정 법률은 2026년 5월 19일 공포되며, 시급성을 고려해 사전검토 제도는 11월부터 우선 시행하고 정기검사 면제 및 과태료 개정 규정 등은 2027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기술 혁신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

한눈에 보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SMR과 핵연료물질 규제 혁신

구분	주요 개정 내용	기대 효과
SMR 사전검토 	인허가 신청 전 설계 단계에서 미리 안전성 검토 수행 (26년 11월 시행)	규제 불확실성 해소 및 개발 속도 향상 
행정부담 완화 	5종의 서류를 1종으로 통합, 우수 사업자 정기검사 면제	불필요한 절차 감소 및 자율 안전 역량 강화 
현장 안전 강화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법제화	방사선 작업 종사자 보호 및 사고 예방 
처벌 합리화 	과태료 상한액(3천만 원)을 위반 수준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	제재 수준의 예측 가능성 및 형평성 제고 

NotebookLM

II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1. 급감하는 공중보건 의사, 의료취약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복무 기간 단축 등 처우를 개선 및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활용을 포함한 인력 운영 체계의 전면 재설계가 시급

- 공중보건 의사(공보의)는 의료취약지에서 필수 의료 제공과 감염병 대응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최근 복무 환경 악화로 신규 편입 인원이 급격히 줄어들며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황
- 의과 신규 공보의는 2019년 663명에서 2026년 98명으로 급감했으며, 전체 인원 또한 1,960명에서 593명으로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져 취약지 진료 공백이 심각하게 우려
- 농어촌 의료의 최후 보루인 보건지소의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됨에 따라, 공보의 미 배치 보건지소는 2026년 1,023개소에 달하고 2027년에는 전체의 86.9%인 1,083개소까지 확대되어 주민들의 일차 의료 및 건강 증진에 큰 차질이 우려
- 육군 현역병이 18개월로 단축되는 동안 공보의는 36개월의 의무 복무를 유지하고 있어, 학습 및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려는 청년 의사들에게 합리적인 선택지로서의 매력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
- 업무 범위의 모호성과 행정 편의적인 배치 시스템 또한 기피 요인으로, 공보의가 제공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 영역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공의 사직 등 위기 상황 시 대체 인력으로 차출되는 부담 존재
- 실제 수요보다 행정구역 단위의 기계적 배치에 치중하여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발생

II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 교육 시스템의 부재와 열악한 인프라도 문제로 지적. 공보의 교육이 행정 관리 목적에 치중되어 지역보건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기르기 어렵고, 술기* 시행이 불충분한 진료 환경 등으로 인해 공보의 근무 경험이 개인의 커리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실정
 - * 술기(術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술 또는 임상 실기 능력을 의미하며, 봉합, 채혈, 상처 처치, 응급처치 등 실제 진료 현장에서 필요한 각종 시술 및 처치 기술을 포함함
- 따라서 향후 의료취약지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단순한 병역 이행이 아닌, 자발적 유입을 이끌어낼 포괄적인 패러다임 전환 필요
- 부처 간 협의를 통한 복무 기간 단축 검토와 업무활동장려금 인상 등 경제적 유인을 강화하고, 공보의 근무 과정을 수련 체계로 전환하여 전문성을 양성하는 정책 제안
- 마지막으로 법제도 개선을 통한 인력 활용의 다변화가 시급. 「지역보건법」과 「농어촌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의사가 없는 보건지소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근무하며 제한적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연한 운영 모델과 인력 활용의 근거 마련 필요

[위기의 지역 의료] 급감하는 공중보건 의사, 텅 비어가는 보건지소

공중보건 의사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지역 의료 붕괴의 심각성과 제도 개선 시급성

핵심 지표: 2026년, 지역 의료의 '최후 보루'가 무너집니다		
위기 진단	원인	대책
<p>신규 의과 공보의 급감</p> <p>2019년 663명</p> <p>2026년 98명</p> <p>2019년 대비 약 85% 감소 (역대 최저)</p>	<p>2배 긴 복무 기간이 '기피' 원인</p> <p>육군 18개월</p> <p>공중보건 의사 36개월</p> <p>현역병 대비 2배, 제도 유지의 결정적 장애물</p>	<p>복무 기간 단축 및 지역 의사 양성 시급</p> <p>복무 기간 단축 및 환경 현실화</p> <p>보건진료 전담공무원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p>
<p>보건지소 '의사 없음' 비율</p> <p>86.9%</p> <p>10곳 중 9곳 의사 부재 예상</p>		

© NotebookLM

국회입법
조사처

2. 반려동물 식이제품 산업의 개발·양산화 지원 방향

문
바로가기

성장하는 반려동물 식이제품 산업, 인증·인허가·양산화 지원체계 마련

- 반려동물 식이제품 산업은 성장성이 큰 고부가가치 분야이나, 인증·인허가·기능성 검증·생산설비·마케팅 지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기업들은 특히 글로벌 진출을 위한 R&D, 마케팅, 인허가 지원 수요가 높고, 국가 인증체계와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이 핵심 과제로 제시됨
- 이에 따라 기술개발부터 사업화·수출까지 연계하는 원스톱형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됨

반려동물 식이제품 산업 한눈에 보기

성장하는 산업, 필요한 것은 전주기 지원체계

1



산업은 빠르게 성장

하지만 지원 기반은 부족

2

85.3%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필요



R&D
88%



마케팅
86%



인허가
70%

3

핵심 과제



인증



기능성·안전성 검증



생산·연구 인프라

4



기술개발



평가·인증



사업화



수출

원스톱 지원센터와 공동 활용형 인프라를 기반으로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필요

3. AI 시대 일자리는 사라지는가 재편되는가: 한국의 대응 전략

인공지능(AI)이 단순한 효율화 도구를 넘어 노동의 방식과 의미를 재정의하는 범용 기술로 자리 잡음에 따라 요구되는 새로운 노동 정책의 방향성을 고찰

- 최근 'Agentic AI'와 'Physical AI'의 확산은 인간의 역할을 개별 업무 수행 (Task Execution)에서 AI 시스템을 설계하고 감독(Design and Oversight) 하는 영역으로 전이시키고 있음
- 최근 WEF, IMF, ILO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일자리 변화 전망을 통해 “AI는 직업의 소멸이 아니라 직무의 재편을 촉발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단순·반복 업무의 자동화는 불가피하지만, 동시에 창의성과 협업을 필요로 하는 직무는 오히려 강화되며 새로운 수요가 생겨난다는 것을 강조
- 이에 대응하여 미국, 중국, EU, 싱가포르 등의 주요국은 단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넘어 학습-자격-경력-고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적 관점의 정책 설계를 추진하고 있음
- 반면 한국은 여전히 직업 단위 중심의 교육 구조에 머물러 있어 실제 AI 시대의 직무 변화와의 연결성이 부족한 실정임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훈련(Training), 자격(Qualification), 매칭(Matching), 고용(Employment), 보상(Compensation), 정착(Settlement)을 하나의 흐름으로 통합한 'TQMECS 전략적 패키지 모델'을 제안
- 결론적으로 AI시대의 국가 경쟁력은 기술 그 자체보다, 변화된 직무 환경에 맞춰 노동자의 역량 구조를 얼마나 신속하고 정밀하게 재설계(Reskilling)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강조

II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의 일자리 정책은 단기 보조금이나 일회성 교육 사업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산업 수요를 반영한 재교육 확대, 직무 기반 자격체계 정비, 기업 채용 연계 강화, AI 활용 인력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 등 노동시장 전반의 구조 개혁으로 나아가야 함

AI 시대, 일자리는 사라지는가? No, '재편'되는가!

AI 시대 일자리 핵심: '소멸'이 아닌 '진화'와 '대응'

직업 소멸 이 아닌 직무의 재편



직업 소멸

(단순 반복 업무 자동화)

주요 국제기구(WEF, IMF, ILO) 전망



직무의 재편

(창의성, 협업 중심 수요 확대)

한국형 대응 전략 'TQMECS' 모델



유기적으로 연결된 패키지형 정책 필요

18세기 증기기관 vs 21세기 AI 혁명



18세기 증기기관

(과거 산업혁명)

-> 새로운 직업군 탄생



21세기 AI 혁명

(지식노동 혁신)

-> 새로운 역할과 직무 창출

선제적 업스킬링과 리스킬링 투자



직무 변화에 맞춘
신속한 재교육
(업스킬링, 리스킬링)



개인별 평생 경력
지원 체계 마련

국가 경쟁력의 척도

4.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성 진단 및 전략적 제고 방안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경쟁력 진단 및 차별화된 핵심 전략

-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개최도시 선정 방식에 심층 평가를 위한 '전환단계 (Targeted Dialogue)'가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확고한 정부 재정보증과 대규모 국제종합경기대회 개최 경험의 조기 입증은 유치 경쟁의 핵심 요소로 부상함
- 주요 경쟁국인 인도는 14억 거대 시장을 앞세워 유치 활동을 전개 중이나 거버넌스 불투명성과 도핑 문제가, 카타르는 훌륭한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더위와 인권 문제가 리스크로 작용하는 등 뚜렷한 한계점들을 내포하고 있음
- 반면 독일은 72%의 강력한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4개 도시가 유치 경쟁 중이며 유력한 다크호스로 부상 중임
- 대한민국의 '전환단계 기반 유치경쟁력지수'는 82.0점으로 주요 경쟁국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IOC 집행위원 및 선수위원 배출로 강화된 내부 영향력과 TOP 후원사 보유, 동·하계 올림픽 등 대규모 이벤트 개최 역량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하고 있음
- 2032년 남북 공동유치 실패의 원인은 전남 유치위원회 미구성과 분산된 추진 체계, 그리고 유연하지 못한 정부 승인 지연에 있었으므로, 2036년 유치를 위해서는 유치위원회를 조기 출범시키고 정부의 신속한 재정보증 조기 승인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임
-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는 지역 분산형 개최의 한계를 극복하고 타 후보 도시와 차별화하기 위해, 단순한 탄소중립(넷제로)을 넘어 환경·사회·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순기능을 창출하는 '넷플러스(Net+) 올림픽'으로의 브랜딩 전략을 추진해야 함

II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 올림픽 유치 계획이 전북의 '글로벌 스포츠 중심도시' 장기발전계획과 유기적으로 맞물리도록 정합성을 확보하고, 스포츠 산업클러스터 등 글로벌 스포츠 인프라와 생태계를 선제적으로 조성해야 함
- 더불어 다수 지역으로 경기장과 시설이 분산되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대회 운영, 숙박, 교통, 관중 경험 등 대회 모든 요소를 인공지능(AI)과 실시간 데이터로 연결하고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 융합 방식의 차세대 '플랫폼형 올림픽' 모델을 전주가 컨트롤타워로서 제시할 필요가 있음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대한민국은 준비되었습니다

핵심 경쟁력	대한민국	주요 경쟁국 비교
 전환단계 기반 유치경쟁력 (Global Competitiveness Score)	 82.0점 세계 1위	경쟁국보다 가장 높음
 국제 이벤트 개최 및 운영 역량 (Event Hosting & Operations)	하계·동계 올림픽 & 월드컵 개최 경험, TOP 후원사 보유	검증된 국가
 넷플러스(Net+) 브랜딩 (Net+ Branding)	단순 탄소중립 넘어 사회·환경 긍정적 가치	차별화된 가치 제안
 경쟁국 리스크 대비 안정성 (Stability vs. Competitor Risk)	재정적·운영적 안정성 매우 뛰어남	인도(도핑/거버넌스), 카타르(폭염/인권) 리스크 존재
 AI 플랫폼 기반 차세대 모델 (AI Platform Next-Gen Model)	분산된 시설을 디지털로 연결, 효율 극대화	플랫폼형 올림픽 제안

Ⅲ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1회 추경
예산안 분석

III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추경 예산안분석

2026. 제1회
추경안 분석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원
문
바로가기

2026년도 제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조 4,437억 원 대비 2,619억 원이 증액(5.9%↑)된 4조 7,056억 원으로 편성

- 세입예산안은 이전수입 4조 4,361억 원(94.3%), 자체수입 309억 원(0.7%), 기타 840억 원(1.8%), 기금전입금 1,547억 원(3.3%)임
- 세출예산안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2조 1,796억 원(46.3%), 평생교육 97억 원(0.2%), 교육일반 2,210억 원(4.7%), 예비비 112억 원(0.2%), 인건비 2조 2,841억 원(48.6%)임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한눈에 보기

총 4조 7,056억 원 (기정예산 대비 +2,619억 원, +5.9%)

세입예산 :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심의 증액

구분	예산액 / 증감(률)
이전수입	4조 4,361억 원 +2,640억 원 (+6.3%)
- 중앙정부이전수입	4조 250억 원 +2,591억 원 (+6.9%)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074억 원 +39억 원 (+1.0%)
- 기타이전수입	37억 원 +9억 원 (+31.3%)
자체수입	309억 원 / 증감 없음
기타	840억 원 -21억 원 (Δ 2.4%)
기금전입금	1,547억 원 / 증감 없음

세출예산(정책) : 유초중등 교육과 인건비 비중 확대

정책사업별 구분	예산액 / 증감(률)
유아 및 초·중등교육	2조 1,796억 원 +2,148억 원 (+10.9%)
평생교육	97억 원 +1억 원 (+0.9%)
교육일반	2,210억 원 +214억 원 (+10.7%)
예비비	112억 원 -19억 원 (Δ14.7%)
인건비	2조 2,841억 원 +276억 원 (+1.2%)

세출예산(기관) : 교육지원청 현장 지원 강화

기관별 구분	예산액 / 증감(률)
본청	3조 4,903억 원 +1,314억 원 (+3.9%)
직속기관	475억 원 +6억 원 (+1.4%)
교육지원청	1조 1,678억 원 +1,299억 원 (+12.5%)

NotebookL

III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추경 예산안분석

○ 종합 검토의견

- **(주요 교육 사업의 국가 자원 종속)**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비의 62.3%(13.9억 원)를 비롯해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운영(2억 원), 자율형 공립고 지원 증액분(5억 원) 등 주요 신규·증액 사업의 상당수가 중앙정부 특별교부금에 의존하고 있음
- **(자체 예산의 경직성 및 핵심 사업 위축)** 교육청 자체 예산 증액분은 교육 콘텐츠 개발 대신 교육공무직 인건비 인상분(147억 6,800만 원)과 시설사업비(1,309억 1,300만 원) 등 경직성 경비에 집중됨. 아울러 핵심 자체 사업인 '전북 미래학교' 운영지원비는 일부 학교의 포기로 5,412만 원 감액되어 정책 지속성 한계를 드러냄
- **(중앙정부 사업 중심의 운영 구조)** 이번 추경은 신규 교육 프로그램을 중앙정부 재원에 의존하고 자체 예산은 인건비·시설비에 투입함으로써, 전북교육청이 독자적 정책 추진보다 중앙정부 사업 집행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줌
- **(사·군 지역 간 예산 편중)** 교육지원청 추경 증액분(1,298억 원)의 59.4%(772억 원)가 전주·익산·군산 등 3개 시 지역에 집중되었으며, 특히 전주와 익산은 대규모 시설공사 중심으로 편성되어 도심권 인프라 확충에 치우침
- **(농어촌 지역 소외 우려 및 형평성 제고 필요)** 장수·진안·무주 등 농어촌 지역은 증액 규모가 제한적이어서 교육환경 개선 수요 반영이 미흡함. 따라서 시설개선 선정의 지역별 형평성과 우선순위 재점검이 필요하며, 향후 농어촌 및 교육취약 지역 우선 지원 원칙을 강화해야 함

문제점 및 현황 (Problems & Status)	해결 과제 및 방향 (Solutions & Direction)
 <p>중앙정부 특별교부금 의존도 심각 학생 맞춤형 교육비의 62.3% 및 주요 신규 사업의 100%를 중앙정부 재원에만 의존</p>	 <p>재정 경직성 해소 필요 전북교육의 독자적 정책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 자원 의존 탈피와 재정 운영의 유연성 확보 시급</p>
 <p>자체 자원, 인건비·시설비에 집중 자체 예산 증액분은 교육 콘텐츠 개발 대신 인건비(147억)와 시설비(1,309억) 등 경직성 경비에 투입</p>	 <p>예산 배분 형평성 제고 경직성 경비 비중을 낮추고, 학생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p>
 <p>특정 도시 지역 예산 편중 뚜렷 교육지원청 증액분의 59.4%가 전주·익산·군산 3개 시 지역에 집중 편성</p>	 <p>지역 간 균형 발전 도모 특정 도시 중심의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도내 모든 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균형 잡힌 예산 지원 절실</p>
 <p>소외 지역 교육 환경 열악 농어촌 및 교육취약지역은 예산 지원 부족으로 상대적으로 교육 환경 개선이 지연되고 있음</p>	 <p>농어촌 및 교육취약지역 지원 강화 장수·진안·무주 등 소외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우선 지원 원칙과 형평성 제고가 시급</p>

NotebookLM

III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추경 예산안분석

○ 주요사업 검토

- **(테마식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전북 지역의 현장체험학습 실시율 감소세에 대응하여 교육부 지원방안과 연계한 도교육청 차원의 계획 수립이 시급하며, 재정여건 악화 속에서 실제 소요 비용이 학교급보다 유형·기간·여행지에 따라 좌우되는 불일치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급·유형별 표준원가 기준 재산정 및 실비 연동 상한제 도입 등 단가 체계를 다양화하는 검토가 필요함
- **(저소득층 생일명절 지원)** 2026년 본예산에서 단가를 인하했다가 제1회 추경에서 다시 환원하는 사업임. 사업 자체의 취지는 인정되나, 중앙정부의 현금성 복지 억제 기조와 전북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이번 추경 환원의 적정성·시기·사업 간 정합성 및 향후 지속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학교스포츠클럽 지원)** 추경 증액분 전액이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어 당장의 재정 부담은 없으나 미배정 시 자체 재원 전환 가능성 등 중장기 지속성을 검토해야 하며,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스포츠클럽 확대와 전국축전 종목 및 단가 상향에 발맞추어 체육 공간 확보, 성과 점검, 여학생 친화 프로그램 실적 관리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직업계고의 교육체계 재편이 단순 투입이나 구조 조정을 넘어 졸업생의 노동시장 안착과 지역 정주율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취업률 단일지표의 한계를 극복하는 유지취업률·취업의 질 등 중장기 지표와 졸업 후 사후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026 전북교육청 제1회 추경 주요사업 분석

주요 사업	핵심 내용	지원 및 과제
 테마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확대	 초(20만), 중(25만), 고(35만) 지원	 교사 책임 경감 및 현장 안전 지원 체계 마련 시급
 저소득층 생일·명절 지원금 4만원 환원	 1인당 연 3회(12만원)로 단가 인상	 복지 강화하되 현금성 지원의 타당성과 지속성 검토 병행
 학교스포츠클럽 지역 연계 및 내실화	 지역 시설 활용과 리그 다양화로 학생 참여 제고	 특별교부금 종료 대비 자체 재원 확보 대책 필요
 직업계고 ‘취업의 질’ 중심 재구조화	 단순 취업률 넘어 유지취업률, 우량기업 취업 등 질적 지표 도입	 졸업 후 사후관리 체계 강화